

## 개도국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0년 선진국 능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석탄, 석유 등의 에너지 소비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오는 2010년에는 선진국을 능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 3월 19일 교토 통신에 따르면 IEA는 현재처럼 이산화탄소 배출 삭감 대책이 없을 경우 2010년의 개도국 배출량은 90년의 59억t에서 1백35억t으로 두배 이상 증가하는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배출량은 1백4억t에

서 1백33억t으로 늘어나는데 그쳐 개도국의 배출량이 선진국을 상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중국과 남아시아의 경우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석탄이 에너지원의 60~7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증할 것으로 IEA는 내다봤다.

중국의 경우 90년의 24억t에서 2010년에는 51억t으로 배출량이 늘어날 것으로 IEA는 예측했다.

## 지구환경기금 해당국가 주도 사업 장려

환경 프로젝트들에 대한 세계최대 비정부 자금지원 기구인 지구환경기금(GEF)은 앞으로 환경 프로젝트 지원에 있어 해당국가 주도의 사업을 장려하면서 국가적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한편, 환경과괴없는 개발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GEF는 지난 4월 3일 뉴델리에서 제1차 총회 폐막성명을 통해 GEF의 사업계획을 재조정, 사업 준비를 간소화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보다 제고하며 사업이 해당국가의 이익에 보다 절맞게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는 1백64개 회원국들중 1백19개국이 참가했다.

GEF는 개발도상국들과 비정부기구(NGO)들로부터 국가 및 지역적 관심사들을 무시하고 세계은행같은 국제기구들의 도구로 행동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은 것과 관련, 이번 폐막성명을 통해 특정국의 환경보호사업에 외국 전문가들만 투입하지 않고 해당국가 전문가들도 많이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GEF는 지난 91년 유엔 및 36개 회원국과 재계가 출연한 기금으로 설립된 뒤 94년에는 기구 재편과 함께 20억달러의 기금을 추가로 받았으며 지금까지 1백19개국에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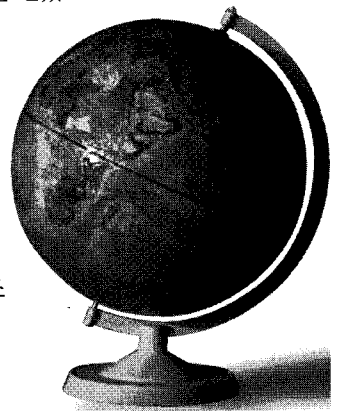
백여 사업들을 시행했다.

GEF는 이달초 개발도상국들의 환경보호사업을 위한 27억5천만달러의 기금을 보충했으며 이중에서 이미 1억5천만 달러를 22개국 17개 사업에 쓰기로 결정했다.

개발도상국들은 GEF가 토지의 사막화나 생물다양성 보호같은 문제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단지 선진국들이 제기하고 있지만 개발도상국들에는 별로 시급하지 않은 기후변화나 오존감소같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지금까지 이 기금의 최대 수혜자는 중국이었으며 인도 및 브라질의 순으로 이 기금을 받았다.

GEF가 지원한 환경계획들 중에는 다뉴브강 정화, 아프리카 빅토리아 호수의 생물다양성 사업, 인도와 아프가니스탄의 야생생물 보존사업, 이집트의 재조림 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 阿洲·濠 연무 남태평양 상공까지 오염

아프리카, 호주 등에서의 산불과 화전으로 인한 연무가 수천km 떨어진 남태평양 타히티, 피지 등의 섬에까지 날아와 이 지역의 대기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미국 대기과학자들이 지난 3월 31일 말했다.

어빈 소재 캘리포니아대의 화학 연구원인 도널드 블레이크는 대기화학 분야로 노벨상을 수상한 바 있는 동료 F. 서우드 롤랜드와 함께 이날 델러스에서 열린 미국화학회 회의에 참석, 이같이 보고했다.

이들은 지난 96년 8~10월 남태평양을 비행하며 조사한 결과, 타히티·피지 등 이 지역 섬들의 상공 3천m지점 대류권 오존 농도가 지구평균보다 3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면서 이같은 대류권 오존농도 증가를 21세기의 중대 대기오염 문제로 규정했다.

블레이크 연구원은 "일부 연무의 경우 묻어지지도 않은 채 호주나 아프리카 등지에서 8천50km에서 1만6천1백km까지 날아왔다"고 말했다.

일반적인 오존층과는 다른 성격의 대류권 오존은 탄화수소와 고온으로 인한 산화질소로 구성돼 있다.

세계 대도시들에서 발견되는 스모그 중에서도 핵심적 유해 인자로 지적되고 있는 이 대류권 오존은 농도가 짙을 경우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을 유발함과 함께 수목과 채소 등의 성장에도 해를 줄 수 있다.

## 세계환경보존강화 노력 다짐

세계 최대의 환경보호 비정부기구(NGO)인 지구환경시설(GEF)은 지난 4월 2일 전세계에 대한 환경보전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국가 및 지역사회, 기업들과 보다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해나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통상 정부나 국제사회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91년 프랑스와 독일 주도로 창설된 GEF는 유엔 회원국들과 기업들이 출연한 20억달러의 재원으로 1백19개국 5백여개의 환경보호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GEF는 1백64개국 대표가 참가한 가운데 뉴델리에서 사흘간 일정으로 제1차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개막 이틀째인 이날 성명을 통해 향후 사업은 "국가의 우선순위"에 기초하고 "지역전문가, 비정부기구 및 산업계의 적극 참여를 포함한 국가간 공조를 강화하는데 목적을 둘 것"이라고 밝

표했다.

성명은 이어 환경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준비와 함께 GEF 가입국들에 보다 많은 자금을 출연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크리스핀 티켈 전 영국 유엔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질병이 창궐하고 식량생산이 위협받고 있으며 수백만 가구가 기아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이해당사국들간에 고갈되는 수자원 통제를 놓고 갈등이 야기될 경우 기후변화가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환경문제전문가들은 인도가 9억6천만명의 국민을 환경오염과 공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도시화 및 소비주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 G8 온실가스 감축-환경범죄 대처 합의

서방선진 7개국(G7)과 러시아 등 이른바 G8은 지난 4월 5일 온실가스배출을 억제하고 국제적인 환경범죄에 적극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G8 환경장관들은 이날 영국 리즈에서 이들간의 회의를 마친 후 발표한 성명에서 지구 환경에 최대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에서 온실가스 배출감축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은 온실가스 배출쿼터 거래,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한 공동 실천방안, 환경개발 등의 문제를 G8 국가들이 국내 정책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일본 교토에서 체결된 기후변화협약의 이행방안을 논의한 장관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강력하고 효율적인 이행체제를 확립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토 기후협약은 오는 2008~2012년까지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을 5.2% 감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장관들은 또 이번 회의에서 산업폐기물 불법 수출, 멸종위기 동식물 거래 등 환경범죄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존 프레스콧 영국 부총리 겸 환경장관은 "지구 환경이 조 직적인 환경범죄에 의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G8 국가들은 환경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멸종위기 동물의 밀수출에 대한 처벌과 감시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으며 클로로플루오르카본(CFC) 등 지구 오존층 파괴물질의 거래규제 방안이 논의 됐다.

현재 멸종위기 동식물 불법거래액은 연간 50억달러로 국제 마약거래에 버금가는 규모다.

또한 국제환경단체들은 연간 6천t의 CFC가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아시아 대기오염 세계 평균치의 3배

남아시아의 대기오염이 세계 평균치의 3배를 넘어서고 있다고 아시아개발은행(ADB)의 환경담당 책임자 카지 잘랄이 지난 4월 3일 밝혔다.

잘랄은 뉴델리에서 열린 지구환경시설(GEF) 제1차 총회를 기념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에서 m<sup>3</sup>당 부유입자의 세계 평균치는 1백25 $\mu$ g(1백만분의 1g)인데 비해 남아시아는 4백30 $\mu$ g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남아시아가 인구 1천명당 숲의 양에서도 세계 평균치인 6km<sup>2</sup>에 훨씬 못미치는 0.5km<sup>2</sup>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잘랄은 남아시아 지역의 환경악화는 주로 인구증가와 빈

곤, 경제발전 초기단계 및 환경정책 부재 등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 지역 국가들이 환경평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수자원 및 토양보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편 환경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자원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을 도모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GEF는 환경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91년에 설립됐으며 국가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자금을 확보할 수 없는 환경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